

## 20세기 냉전체제와 미국

2018.11.6.

‘제주 4.3 미국의 책임을 묻는다.’

4.3 유족회 주최,

강우일

제주 4.3은 국가가 저지른 범죄행위였다. 미국 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관여한 일이다. 우리는 국가가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국가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일에 큰 책임이 있는 미국이란 나라는 도대체 어째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어떤 과정을 걸어온 나라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앞으로 4.3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묻는 긴 작업을 위해서 필요한 선행 작업이 될 것 같다.

### 국가에 대한 질문

2014년 이 땅에서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다. 세월호 침몰이라는 대참사다. 476명의 승객 중 29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인 비극적 사건이다. 어떤 사람은 4월16일을 기하여 세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것은 온 국민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상식으로 여겼던 것들이 뿌리째 흔들리고 뿔뿔해져가는 체험을 하였기 때문이다. 거대한 여객선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양상으로 서서히 바다로 가라앉아 가는 모습을 전국에서 주시하고 있는데, 자력으로 탈출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구출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가지 않은 것이다. 해경의 구조선과 헬기가 주변을 맴돌고 있었으나, 그들이 해 낸 것은 별로 없고 그나마 답답해서 달려온 민간 어선들이 그나마 자력으로 나온 사람들을 구출해냈다. 해군은 특수부대도 있고 함정도 있지만, 해경과 협조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꿈쩍도 못했다고 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더 불가사리한 일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요인들이 여러 가지였지만 모든 요인들이 다 정부 행정 기관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 드러났다. 우선 18년이나 일본에서 취항하고 퇴역한 배를 일본에서 사들여 와서 규정을 무시하고 증축과 구조변경을 하여 개조를 한 것부터가 정부 당국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허가가 떨어졌는지 수수께끼다. 선박의 구조 변경이나 개조를 허가하는 해양수산부에서 또 선박의 평형유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변경을 어떻게 허용했는지도 납득할 수가 없다.

그리고 세월호 침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물의 과잉 탑재와 적재

양상이 문제인데 화물 적재가 올바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감독하는 소임은 해양수산부에서 위탁한 한국해운조합에서 관장하는데, 이 해운조합이란 기구가 여객선과 화물선 등의 선주들이 모여서 만든 조합이니, 선주들이 모여서 만든 조합에서 자신들의 선박의 안전 관리를 감독하도록 맡기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이다.

그리고 차츰 드러난 사실은 이 해운조합의 상층부에 해양수산부 관료들이 퇴임 후에 낙하산으로 포진하여 선박 회사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보조 역할을 충실히 해주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행정과 업자들 사이의 유착은 해양수산부와 선박회사들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 모든 영역과 정부 대부분의 부처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관행이었다. 언론은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금피아, 첼피아, 국피아, 군피아, 교피아 등등 정부 여러 부처에서 퇴임한 사람들이 산하 공기업이나 관련 업체와 유착하여 우리 사회의 관행화된 구조적인 부정과 비리를 지적하였다. 대통령도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는지 당시에는 ‘관피아’, ‘국가 개조’ 라는 표현을 동원하며 잘못된 관행을 철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국가 전역에 오래 일상화되었던 관행이 하루아침에 해소될 수는 없다.

### **국가와 통치권력**

세월호 사고 직후에 유가족 중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는 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이런 국가의 국민으로 살고 싶지 않다. 문제가 일단락되면 다른 나라로 이주하려고 한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새삼스럽게 생각했다. ‘국가란 무엇일까?’

사전에 보면 국가는 ‘일정한 영토와 그곳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통치권을 갖고 있는 공동체, 나라’ 라고 되어 있다. 국가는 통치권을 갖는 공동체라고 풀이한다. 국민을 다스리는 권력을 가진 주체다. 그렇다면 국가는 국민의 위에 자리하고 국민은 국가에 추종해야 하는 아랫사람이라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여기서 국민이라는 단어 자체에 문제가 있다. 국가의 민중이라는 말인데 국가를 이루는 사람들이니, 국가 쪽에 더 방점이 찍혀 있다.

이러한 개념에는 좀 문제가 있다. 우리 헌법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온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1조에 나오는 말이다. 우리 헌법 정신에 의하면 국가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통치권은 국민에게서 받는 것이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라고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국민이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우리 헌법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훌륭한 법이다. 그런데 이 헌법 정신이 우리 현실에서는 제대로 살려지지 못하고, 일반 사전에 나와 있는 국가 개념, 즉 국민 위에 군림하며 통치하는 국가라는 개념이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20세기 전반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으로 인류는 진리를 하나 깨달았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인간의 생명을 멋대로 박탈하거나 훼손할 권리는 아무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국가라고 해도 인간 생명과 기본적인 인권을 마음대로 박탈할 권리는 갖지 못한다는 깨달음이다. 두 번의 세계대전에서 희생된 수 천만 생명의 죽음과 고통을 통해서, 인간 생명은 국가의 가치 위에 우뚝 선 존재라는 인식이 싹트기 시작했다. 국가가 존재하기 전부터 국가 권위의 근원을 부여하는 주체가 인간이라는 인식이 근원적으로 형성되었다. 그래서 1948년 12월8일 유엔에 모인 50개국 정상은 세계인권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우리는 보통 나라, 국가라고 하면 아주 숭고하고 고귀한 가치를 갖고 있고, 국민 모두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지켜내야 하는 신성한 존재로 인식한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 몸 바치는 사람을 존경하고, 애국자라고 찬양한다. 그러나 인류가 살아온 역사의 여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가(nation, state, country)라는 존재는 과연 진정으로 그런 신성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에 대해 냉정하게 비판하고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역사의 여정에는 국가의 이름으로 가공할 불의와 죄악이 엄청나게 자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의 이름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국민 대다수의 동의나 공감을 얻지 않고, 소수 권력자들의 편향된 이념이나 권력을 위해 정당치 못한 폭력적 방법으로 힘없는 대중을 억압하고 멋대로 다루었다.

수 천만 명의 인명을 살상한 2차 세계대전 누가 일으켰나? 독일 나치 정권이 한 짓이다. 조선을 식민지로 하여 36년간 수탈하고, 중국과 전쟁 불사하고 남경에서 30만 명 대학살극을 일으킨 세력은 누구였나? 일본 제국주의 정권이다. 모두 신성한 국가의 이름으로 자행했다. 사회주의 인민 공화국을 만든다며 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숙청하고 말살한 소련, 민족을 해방한다며 6.25 전쟁을 일으켜 또 수백만 명을 희생시킨 북조선, 모두 국가와 민족으로 이름으로 저질렀다.

세계 초강국으로 막강한 국력을 자랑하는 미국 건국의 역사는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이주로 시작되었다. 1492년 콜롬버스가 서인도제도에 상륙함으로써 아메리카 대륙이 유럽인들에게 알려졌으나 처음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향해하여 찾아가서 원주민들과 교류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차츰 더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왔다. 원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상품을 주면서 눌러 앉았다. 원주민들은 대대로 땅을 개인이 소유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았다. 땅은 자기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조상대대로 그냥 거기 있었고 아무도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을 내 것이라고 금 굿고 다른 사람을 못 들어오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주민들이 들어와 집짓고 살아도 거부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였다. 아무도 원주민에게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럽에서 온 이주민들은 자기들이 사는 땅에 금을 굿기 시작했다. 내 땅이라고 문서에 등록하고 소유권을 주장하고 점점 더 소유권을 넓혀가기 시작했다. 점점 더 많은 이주민이 몰려오면서 그들은 원주민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총과 대포로 그들을 쫓아냈다. 결국은 대륙의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다 차지하고 원주민들은 좁은 보호구역 안에 가두어 버렸다.

유럽에서의 이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600년대 들어와서다. 버지니아와 캐롤라이나는 영국인들이, 루이지아나는 프랑스인들이, 뉴욕과 뉴저지는 네델란드인, 델라웨어는 스웨덴인, 플로리다는 스페인인들이 차지하고 식민지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각국의 이민들은 자기들의 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국 군대 파견을 요청했고,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여러 나라들이 군대를 파견하여 식민지에서의 기득권을 확보하려고 수많은 피를 흘렸다. 그러나 미대륙을 식민지로 삼아 거기서 되도록 많은 이익을 뽑아내려는 유럽 국가들의 압박이 점점 심해지자, 미대륙 이주민들은 유럽의 모국으로부터 독립을 얻기 위해 새로운 전쟁을 이어가야 했다. 처음엔 영국과의 전쟁, 그리고 프랑스, 스페인, 멕시코 등과 차례로 전쟁을 이어가야 했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포하고 새로운 국가로 건국한 1789년, 유럽계 이주민은 100만 명 정도였고, 원주민은 1천만 명 정도였다. 그런데 그 후 100년이 지나면서 이주민은 1억 명으로 늘어났고, 원주민은 50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이주민은 100배가 늘어났고, 원주민은 20분의 1로 줄어들었다. 100년 사이에 이런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 것은 이주민들이 이룬 건립한 국가가 아무

런 경계도 없이 그냥 여러 부족으로 나뉘어 자유롭게 흩어져 살던 원주민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갔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난 원주민들은 학살당하고, 식량을 박탈당하고, 질병에 시달리다 자손의 대가 끊겼다.

급속도로 증가한 이주민들이 각 지역에 정부를 세우고 소위 주를 조직해 갔으나 여러 주들 간의 이해관계가 달라서 미국은 내부적인 갈등이 시작되었다. 나중엔 미국 내의 여러 주들끼리 지역적인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노예제도 용인과 반대를 놓고 대립하다가 1861-1865년 4년간에 걸친 남북 전쟁이 일어나 엄청난 희생자를 낳았다.

미국이란 국가가 형성된 과정은 한 마디로 끊임없는 전쟁의 연속으로 수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고 땅을 차지하는 방법으로 구축되었다. 북미대륙을 동쪽에서 서쪽까지 완전히 장악한 미국이란 국가는 국가의 경계선을 해외로 더 확장해 나가기 위해 1900년 하와이를 합병하고 쿠바와 필리핀까지도 영토를 확장해 나가려고 스페인과 또 전쟁을 벌였다.

미국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1905년 7월 29일 미국 육군 장관 태프트를 도쿄에 파견하여 일본 제국 수상 가쓰라 다로와 비밀회담을 했다. 정식 조약 체결은 아니었고 각서 형태로 기록된 대화 내용에는 미국의 필리핀에 대한 지배권과 일본 제국의 대한제국에 대한 지배권을 상호 승인하는 문제를 협의하였다. 이 기록의 내용은 미·일 양국이 모두 극비에 부쳤기 때문에 1924년까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각서에 따르면 일본 제국은 미국의 필리핀에 대한 식민지 통치를 인정하며, 미국은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을 침략하고 한반도를 '보호령'으로 삼아 통치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 미국은 이때부터 이미 동아시아에 자국 문패를 달려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었다.

세계2차 대전이 끝나고 일본이 패망하자 소련이 한반도 북쪽에, 미국이 남쪽에 진주하였다. 미국군대는 한반도에 상륙하고 일본군에게 항복을 받음으로써 한반도를 일본 영토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제주도에도 당시 7만에 가까운 일본군과 미군에 최후 항전을 하기 위한 일본군의 무기와 화력이 집중되어 있었기에 미군은 제주도에 따로 일본군의 항복받음으로써 제주 땅을 일본 국토의 연장으로 인식하고 점령군으로 진주하였다.

4.3의 비극은 이러한 역사적, 국제적 콘텍스트에서 일어났다. 미군정당국은

1947년 3월1일 북초등학교 집회에서 수많은 제주도민이 신탁통치 반대, 외세 배격, 자주 독립을 이루자는 주장을 펴고 남한의 단독 선거를 반대하고 나서자, 이는 바로 소련 공산주의자들의 배후 조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공산진영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미국의 점령지역을 지켜야 한다는 목표의식으로 대처했다. 한반도 주민들은 일본을 패망시킨 일본의 적인 미국군이 자신들을 일본제국의 모든 굴레에서 해방시켜 줄 해방군으로 기대하고 있었지만, 미군은 세계 속에서의 미국의 영향력과 패권을 지키기 위해 한반도에서 공산주의진영과의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1950년 6월 25일 북한 침공으로 한국전쟁이 시작되자 미국은 즉시 현지시각 6월 25일 14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했고, 안보리는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여 "조선인민군의 즉각적인 전투 행위 중지와 38도선 이북으로의 철수"를 요청하는 결의안을 9대 0으로 가결하였다. 그리고 불과 닷새 후인 6월30일에 미국은 일본에 주둔하던 제 24사단을 한국으로 신속히 이동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다음날인 7월1일 한국으로 병력을 투입하는 한편, 같은 날 유엔 안보리에 "유엔군사령부의 설치와 유엔 회원국들의 무력 원조를 미국 정부의 단일 지휘 아래 둔다"는 공동결의안을 영국과 프랑스와 함께 제출한 것을 보면 미국 정부는 한반도에서 공산세력의 확산을 반드시 저지하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한국전이 끝난 후 미국은 공산진영과의 냉전적 대결관계를 자국의 턱밑에 있는 쿠바에서 이어가게 된다. 아이젠하워 정권 말인 1960년 3월 미국은 백악관과 CIA에 의해 브루투스라는 작전명 아래 쿠바 침공을 계획했다. 마이애미에 거주하는 약 1,500여 명의 쿠바 망명자 출신 지원자를 모아 부대를 만들어서 과테말라 모처에 위치한 비밀 캠프에서 군사 훈련을 시작했다. 다만 그해 5월에 발생한 U-2기 격추 사건으로 인해 아이젠하워는 외교적으로 궁지에 몰리며 브루투스 작전 추진이 주춤거리게 되었다.

작전을 추진한 아이젠하워 정부의 임기가 끝나고 케네디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쿠바 침공 작전에 대해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나 CIA뿐만 아니라 국무성과 펜타곤까지 개입된 상태에 지금까지 쓴 비용과 1년 가깝게 군사훈련을 계속해 온 쿠바 망명자 1500명을 포기할 수 없다는 강경파들이 주장과 쿠바에 침공군이 상륙하면 쿠바 국내의 호응이 있을 것이란 CIA의 호언장담만 믿고

쿠바 피그스 만 상륙작전을 승인했다. 불과 대통령이 된 지 3개월만의 일이었다. 그러나 쿠바군도 이런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알고 철저히 대비한 결과 침공 작전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다.

쿠바의 카스트로는 그대로 미국의 침공이 실패하기는 했으나, 언제 또 다른 시도가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소련에 도움을 요청했고, 소련은 소련대로 쿠바를 이용하여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려고 쿠바에 핵탄두 미사일을 설치했다. 이 정보를 입수한 케네디 대통령은 1962년 10월16일부터 28일까지 13일간 공개적으로 소련 공산당 서기장 흐루치초프에게 즉시 미사일을 철거하도록 요구했다. 그런데 사실 미국은 공산진영 세력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소련 국경선을 따라 터키에 미사일을 줄줄이 배치해 둔 상태였다. 그러나 케네디는 소련의 쿠바 미사일 배치는 ‘미국이 수용할 수 없는 의도적 도발이며, 정당화될 수 없는 현상유지에 대한 도발’이라고 선언했다.

흐루치초프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우리는 피그스 만 사건은 시작에 불과하며 미국인들이 쿠바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쿠바는 미국의 또 다른 침략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은밀히 핵탄두 미사일을 설치하는 방법을 모색했다. 주 목적은 쿠바에 우리 미사일을 설치함으로써, 미국이 카스트로 정부에 대해 경솔한 군사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할 것으로 생각했다. 쿠바를 보호하는 것에 더해 우리의 미사일은 서방에서도 원하는 ‘세력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미국은 우리의 군사기지를 포위하고,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했는데, 바로 코 앞에 있는 쿠바에서 그들을 향해 미사일을 겨누고 있다면 과연 어떤 기분이 들지 이제 그들도 알게 될 것이다.’

쿠바에 소련의 미사일 기지 건설이 가속화되자 케네디 대통령에 대한 미국 정부 내부의 압박이 가속화되었다. 1962년 10월19일 군참모진은 모두 쿠바에 대규모 공중폭격을 가하자고 최고 사령관인 케네디 대통령을 강하게 압박했다. 그러나 케네디는 그런 결정은 최후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보좌관들의 핵전쟁 요구를 거부했다. 존 F 케네디의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는 당시 주미 소련 대사였던 도브리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우리 대통령께서는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군부로부터 쿠바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도록 강력히 요구 받고 있습니다. 만약 상황이 훨씬 더 길게 지속된다면 군부가 대통령을 몰아내고 권력을 장악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어떻게 해결되었을까?

전세계가 긴장 국면에 들어서고 금방이라도 핵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케네디도 흐루시초프도 핵전쟁을 바라지 않았으나, 어느 쪽도 체면 깎이는 일 없이 사태를 수습할 방법이 필요했다. 케네디 대통령은 당시 교종 요한 23세에게 연락을 취하고 중재 노력을 요청했다. 요한23세는 본인이 세계1차대전에 한 번은 병사로 또 한 번은 군종장교로 참전하며 전쟁의 참상을 목격하고, 세계2차대전 때에는 터키에 교황대사로 있으면서 유럽에서 피난 온 수 천명의 유대인들을 보호하고 도움을 준 분으로 교종에 즉위한 다음 세계의 평화에 각별한 관심을 쏟고 공산권과도 대화를 시작하였다. 교종 요한23세는 모를리온 신부라는 사절을 미국과 소련 양측에 보내어 ‘쿠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교황의 중재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교황이 두 국가에 미사일 선박 운송과 봉쇄를 모두 중단할 것을 제안한다면, 두 국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케네디는 교종의 중재 제안을 환영했다. 다만, 쿠바에 있는 소련 미사일은 제거되어야 함을 말했다. 소련 측에서도 흐루시초프 서기장이 교종의 제안을 완전히 받아들였다는 연락이 왔다. 다음 날 교종은 공식적으로 국가 지도자들의 도덕적인 책임감과 평화를 호소했고 이는 미국과 소련 대사관에 전달되었다. ‘모든 통치자들에게 간청하는 바입니다. 평화를 외치는 인류의 소리에 귀를 막지 말아주십시오. 협상을 재확인하기 위해, 평화를 위한 시동을 걸기 위해, 모든 사람들은 지혜와 신중이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는 메시지를 모스크바에 보냈다. 이튿날 프라우다지 일면 기사 타이틀에는 이런 문구가 나왔다. ‘인류의 외침에 귀를 막지 말라.’ 이는 모스크바가 교종의 메시지에 응답을 보낸 것이었다. 10월28일 흐루시초프는 케네디에게 미사일 기지작업을 중지하겠다는 통지를 보냈고 쿠바를 향하던 배들은 소련으로 돌아갔다.

사실 1962년 10월30일까지 미국은 9개의 시험용 미사일에 대 소련용 핵탄두를 장착했다. 미국은 이미 전시 상태에 준하는 최고단계인 데프콘-2로 전면적인 대규모 공격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위기가 있는지 30년이 지난 후 케네디 정부의 국방장관이었던 로버트 맥나마라는 1992년 11월 러시아 잡지에 실린 기사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 기사에 의하면 1962년 위기가 고조되었을 때 쿠바에 있던 소련군은 162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이 때 케네디 대통령이 군부 장군들의 압박을 받아들여 쿠바 공격을 명했다라면 세계는 종말을 맞았을 것이다.

미국 대통령 케네디는 군부가 제시하는 ‘미국이 가공할 무력으로 세계에 평화를 강요하는 팩스 아메리카나’를 거부했다. 이는 전임자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고별사에서 예고한 위험에 대한 저항이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퇴임 사흘 전에 이렇게 경고했다. ‘우리는 거대하고 영구적인 군수산업을 만들어 내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350만 명이 군수업체와 직간접으로 연결되어 있고, 매년 미국의 모든 기업들이 내는 순이익보다 많은 비용을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군사시설과 대규모 군수산업의 결합은 매우 위협적입니다. 모든 도시, 주 의회와 모든 연방정부 사무실에서 경제적, 정치적 심지어는 정신적인 영향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발전이 필요하다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의 심각한 폐해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의회에서는 군산 복합체의 부적절한 영향력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 우리, 나아가 세계 인류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결합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자유 또는 민주주의를 위협에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당연시해서는 안 됩니다.’

군산복합체는 그 이후 미국이란 국가로 하여금 끊임없이 세계 곳곳의 분쟁에 관여하고 전쟁에 앞장서게 하였다. 쿠바 사태 이후 케네디 대통령은 라오스 분쟁에 개입하도록 또 다시 CIA와 군부의 강한 요청을 받게 된다. 합참은 배치에 필요한 병력 숫자를 점점 늘려갔다. 처음엔 4만, 3월말에 6만, 4월말에는 14만 명이 필요하다고 압박하였다. 그러나 케네디가 합참에 저항할 수 있게 힘을 북돋아 준 군사전문가는 바로 늦은 4월 그를 방문한 더글러스 맥아더 퇴역 장군이었다. 맥아더 장군은 대통령에게 말했다. ‘누구라도 아시아 본토에서 미국 지상군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정신 상태부터 검증해 봐야 할 겁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베트남 전쟁에 미국이 깊숙이 개입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고, 미군을 다음 해까지 베트남의 진흙탕에서 철수시키라고 군수뇌부에게 지시했다. 그러나 다음 해에 케네디 대통령은 암살되었고, 후임자인 존슨 대통령은 베트남 전쟁에 대규모 병력 투입을 결정하고 오랜 진흙탕 싸움이 계속되며 수많은 목숨이 스러져갔다.

미국이란 국가는 베트남 전쟁 이후로도 세계 곳곳의 전투에 병력을 파견할 뿐 아니라 전쟁을 적극적으로 일으켰다.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 그러나 이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을 군부가 압박했듯이 흐루시초프 서기장을 압박했던 소련의 군부도 만만치 않았다. 쿠바 위기에서 소련의 군부도 흐루시초프 서기장이 미국에 맞서서 강력한 무력행사를

명령하도록 끊임없이 압박했다고 한다.